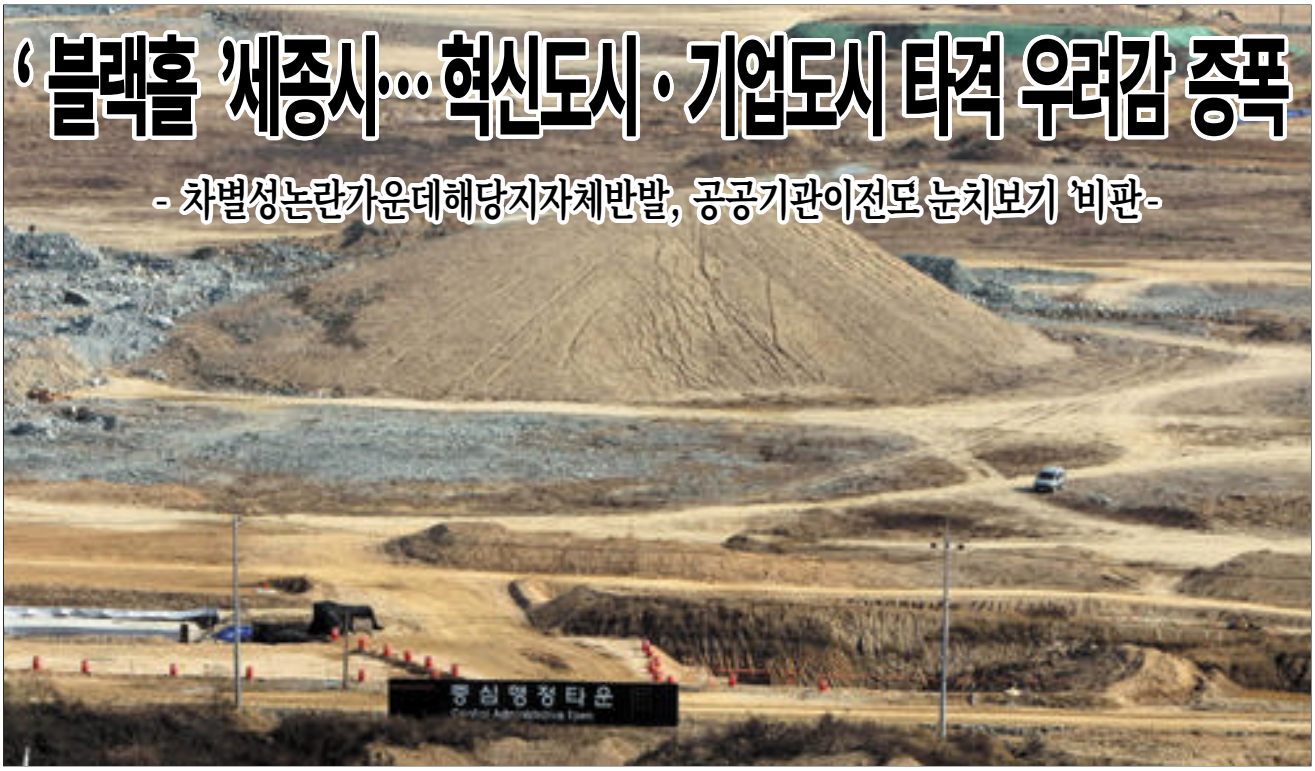
‘블랙홀’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타격 우려감 증폭

- 차별성논란가운데해당지자체반발, 공공기관이전도 눈치보기 비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심지어 지방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들어갈 기업까지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는것아니냐는우려감이커지고있다. 행정부처의이전을백지화 혹은축소하는대신 기업들이 들어갈 부지를 확대해 사실상 ‘기업도시로건설하겠다는게정부가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의 주요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세종시가 유수 기업들을 끌어들이는블랙홀이 될것이라는 이야기다. 정운찬총리는“ 상당한수준의인센티브를제공할 테니 세종시 이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관심을 독려하고 있다. 정 총리는 더 나아가 “ 이름만대면금방알만한중견기업이세종시로이전할마음을 90 95% 굳히고있다 ” 면서, 정부와기업간에접촉이상당한수준에서진행되고있음을시사하기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정부가현재거론하고있는세종시입주 기업들에대한인센티브들이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센티브의수준은상당할 것으로예측되기도 한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학교와병원설립규제완화, 자족기능 용지 20% 확보, 기업과 대학의 원형지 개발허용등현재거론되고있는세종시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파격적인 내용들 ”이라면서긍정적인평가를내렸다. 조건만맞는다면갈수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

혁신·기업 도시 해당 지자체‘ 반발 ’

정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세종시의 토지계획변경은주거 · 녹지시설을줄이고, 상업 시설이나 대학 부지의 확대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세종시의 주거 용지 비율은 전체면적의21% 수준이다.

공원 · 녹지 면적은 53%에 달하고 있다. 반면, 자족용지중상업 · 업무 용지는 2%, 대학 · 병원 · 극장 등이 들어설 부지는 3%이다. 또 기업 유치에 가장 핵심적인 상업 용지는 1.1%에 불과하다. 자족기능을 확대하기위해대학, 연구소, 병원, 공장등이들어설 용지를 넓히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이유에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유치해개발에나서고있는해당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해당 지역구의 반발로 세종시의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기류가 감지될정도이다. 정운찬총리역시지방의분위기가좋지않고, 세종시 특혜시비까지불거지자세종시를기업중심도시로 부르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했다. 그만큼부담된다는것이다.

실제로정총리는지난달18일전경련회장단과의 만찬에서 “ 여러 곳에 기업중심도시가있고, 세종시에 특혜가 갈까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면서,“ 다른 지역에서 세종시가 ‘ 수퍼 수퍼 기업도시 ’가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오늘 이후에는 기업중심도시라는말을하지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를홍보하다가 되레불을꺼야하는상황에처한 꼴이다. 조원동세종시실무기획단

장도 "마구잡이식의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지금 구상하는 그림은 다른 지역에 전혀 유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신규라든가 수도권에서 이주해 온다든가 아니면 외국기업체들, 연구기관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차별성' 모호'

이처럼 지방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더 완곡하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수정은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세종시를 기업도시 성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던 정총리도 "혁신도시 의원안 추진은 그대로고, 공공기관의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불끄기에도 지방의 우려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세종시나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큰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당초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되도록 묶여 있다. 세종시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를 목표로 했고, 기업도시는 기업을 유치해 포항처럼 특화시킨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사실상 기업도시의 개념으로 바뀌자 차별성이 없어졌다. 예컨대 대구 동구, 전북 전주·완주, 제주 서귀포, 경북 김천 등 지난 2006년에 수립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개발 방향은 첨단 과학과 교육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충북 진천·음성의 경우 정보 기술(IT)·바이오 기술(BT) 산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문화 중심지를 꿈꾸고 있다. 세종시 옆에 유사한 작은 도시가 들어서는 셈이다. 여기에다 세종시는 사실상 광역 개념으로 보면 수도권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같은 조건이라면서 당연히 세종시로 간다는 분위기가 높다. 세종시는 자족기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현재 7% 수준인 상업지구를 20%까지 높이는데다,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비해 조건이 더 좋아지는 것이다. 재계의 관계자가 "솔직히 기업들은 땅 값보다는 병원, 교육 시설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가될 것인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할 정도다.

공공기관 이전도' 눈치 보기'

혁신도시 등의 기업 유치는 차치하고 공공기관이 전도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정부는 충남에 옮기기로 한 무역위원회·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정부 소속 기관 23개의 이전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토지보상과 이전 승인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설계에 착수했거나 설계 공모 수준의 단계를 밟는 곳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부발전·국립특수교육원·질병관리본부 등 33개 기관에 그쳤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경찰종합학교 등 8개 기관만 이부지 매입까지 마쳤을 뿐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이 모두 157곳에 이른데 진척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다. 이전 계획을 승인받은 나머지 80여 곳의 공공기관은 설계 용역 절차도 밟고 있지 않았다.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에 부지 매입 등을 독려하고 특히 가스공사(대구), 한국전력(광주·전남), 한국도로공사(경북) 등 주요 이전 대상 기관에는 올해 말까지 청사 설계 및 부지 매입을 시작하도록 요청키로 한 것도 지방의 우려를 최소화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공공기관 역시 눈치를 보기는 마찬가지이다. 중앙정부가 가지 않는데, 공공기관만 가라는 것에 대해 불평도 많다.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세종시와 맞물려 돌아갈 혁신도시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방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내려가고 싶겠냐"면서, "매듭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는 꼴"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형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세종시가 삐끗하면 혁신도시 방안도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의 한 관계자도 "무턱대고 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밟았는데 일정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바뀌면 그 역시 낭패이지 않겠냐"고 하소연했다.

새로운 지원책 나오나

결국 세종시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방에 사람과 물자가 몰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라는 게 지방정부의 생각인데, 이를 위해서는 높은 토지조성원가를 낮추고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출신의 한나라당 A의원은 "설령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안되더라도 기업은 유치해야 한다"며, "지역에 인구와 소득이 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전인 만큼 혁신도시에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새로운 지원책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채우지 못하는 전국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희생시켜 세종시 하나로 간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반발이 날 것"이라며 "반발이 나면 그곳에 또 집중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철균
서울경제신문 기자